

## 광주시는 친환경차 메카... 시내버스는 '노후된 디젤'

승객들 심한 악취에 브레이크 소음까지 '왕짜증' 시, 차량정비 내용조차 파악 못해... 안전엔 뒷짐 운송업체, 잇단 불편 민원제기에도 '나 몰라라'

광주시가 친환경차 메카를 주창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상당수는 노후화된 디젤차량이라는 눈가리고 아웅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엔진이 타는 냄새와 심한 브레이크 마찰음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버스업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로 접어들어 히터 등에서 나오는 악취마저 심해지면서 시민들은 버сий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광주시는 각 시내버스 회사에서 9년 이상된 노후 디젤차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999대다. 하루평균 이용객 수는 33만여명으로 올해 시내버스 전체 이용객은 1억 2,900만명에 달한다.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운송업체는 안전은 물론 이용객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 회사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 등 매년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도 육안으로 알 수 있는 사항 외에 각 버스회사에서 진행하는 차량정비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9년에서 최장 11년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지역에 몇 대 운행되고 있는지도 광주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 고모씨(56·여)는 "광주에서 운행 중인 일부 시내버스에서는 엔진이 타는 냄새가 나 목격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린 적도 있다. 또 브레이크 마찰음이 너무 커 버스 안에서 제대로 통화하기도 어렵다"며 "광주시와 운송업체들이 정기적으로 수리는 하는지, 폐차 직전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고 불안해했다.

김 모씨(32)는 "준공영제 이후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객안전과 관련된 차량정비 내용은 자치단체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무엇보다 시내버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승객들에게 민원을 직접 받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들도 난감해하고 있다.



수능 성적표 확인하는 수험생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일인 4일 오전 광주여자고등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은 수험생이 점수를 확인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익명을 요구한 한 버스기사는 "소음이나 히터 냄새 때문에 승객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수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헤드릴 수 없다"며 "기사들은 운행만 신경 쓸 뿐이다. 차량 내구연한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의 몫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적으로 시설킨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때 광주시 대중교통과 공무원과 버스조

합원이 직접 회차지를 돌려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는 에어컨이나 히터작동 시 악취, 타이어 불량 등을 확인하고 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각 회사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면으로 이어짐 /황애란·김종찬 기자

## 도의회 '밥그릇 챙기기?'

어린이집 운영 도의원 상임위서 지원금 대폭 증액 미세먼지 예방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은 되레 칼질

전남도의회가 민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예산 을 크게 늘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증액을 주도한 해당 상임위원회에 도내 최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이 속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제출한 내년 도 예산안 중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액'을 당초 17억7,156만원에서 18억8,931만원이 늘어난 36억6,087만원으로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은 전남도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도내 국·공

립, 법인, 민간 등 모든 어린이집에 반당 7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내 1,144개 어린이집의 7,030개 반이 해당되며, 도비 30%와 시·군비 70%를 합해 1년 사업비는 59억원에 이른다.

어린이집은 반별 운영비로 보조교사 채용과 처우개선, 교구 구입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증액된 예산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반별 지원금이 기존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는 내년부터 첫 도입해 만 0~2세반에 월 6만원을 지급키로 한 경남도와 만 0세반에만 3만원을 지급 예정인 울산과 비교해 과다한 금액이라는 논란이 일

고 있다.

증액 예산도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 어린이집에만 지급하기로 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환경위가 증액한 어린이집 예산은 이것만이 아니다.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예산도 집행부는 9억9,500만원을 편성했지만, 보건복지환경위는 2억8,500만원을 증액해 총 10억 2,80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어린이집 지원액을 증액한 보건복지환경 위에는 부인이 순천에서 도내 최대 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의원이 속해 있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2면으로 이어짐 /정근산 기자

## 민주인권대학원 건립 전문가 키운다

시, 5·18정신 계승사업 계획안 확정

광주시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작업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4일 오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용섭 시장과 5·18부상자회 김후식 회장,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원순석 이사장 등 민주화관련 단체 대표,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 및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해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

향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본 계획 수립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올해 최종 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는 4·19혁명 이후 추방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사정리 ▲기념행사 및 추모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국내외 연대강화사업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등 5개 분야, 42개 추진과제 계획 등이 담겼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부문별 민주화운동 사료 구축 및 자료집 발간 ▲트라우마센터 국립화 ▲지역대학 민주화 관련 교양교육 설치·지원 ▲가칭 '민주인권대학원' 설립 지원 ▲과거사 진상규명 및 정명운동 공동추진 등이다. /황애란 기자

##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 저소득 저신용으로 대출이 힘든 분!
-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 하시는 분!
- 사회복지 상담이 필요한 분!

- 서민대출 상담**
  - ✓ 골목상권특례보증대출
  - ✓ 빚고을론
  - ✓ 햇살론
- 채무조정 상담**
  - ✓ 개인워크아웃
  - ✓ 프리워크아웃
  - ✓ 개인회생·파산
- 사회복지 상담**
  - ✓ 국민기초생활보장
  - ✓ 영구임대주택 지원
  - ✓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 ▶ 대출 처리비용 등으로 선입금 요구!
- ▶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가능하다며 선입금 요구!
- ▶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이라며 안전계좌로 이체 요구!
- ▶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요구!